

현장과 전체상에 충실한 한국학을 위한 제언

오수창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조선시대 정치사 전공

ohsoo@snu.ac.kr

- I. 머리말
 - II. 현장 속으로
 - III. 개인과 사회의 전체상 파악
 - IV. 토론 활성화
 - V. 맺음말
-

I. 머리말

이 글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2018년 개원 40주년을 기념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회의에 제출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학'을 정의하거나 그 목표와 과제를 따져보는 작업이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하지만 한국학의 정의와 근본적 목표는 여전히 명확한 모습을 잡기 힘들고 한국학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핵심과제에 대한 논의도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다시 사회와 연구의 현장으로 돌아가 구체적인 문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한국학의 활로를 개척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학 연구자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를 그 사회적,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 참고하였으면 하는 사항을 개진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회적 맥락과 구분하여 한 개인의 고민과 성취를 탐구하는 연구, 사회 상황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그 시대적 성격을 염두에 두지 않는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는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연구자들이 다양한 문제의식과 방법으로 개인의 사상이나 작품, 과거와 현재의 개별적인 사건이나 상황을 설명하는 작업은 그것들대로 한국학의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되겠지만, 그 연구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방향을 달리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학의 앞길에 대한 제언이 이 글의 목적인 만큼 문사철을 아우르고 고대부터 현대까지 꿰뚫어 보는 학문적 식견 위에서 논제를 풀어가야 마땅하지만, 필자가 주로 공부해 온 조선후기의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¹

1 이 글의 심사자는 필자가 완성도와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요구를 하였으며 그 대부분이 타당하고 필수적인 사항이었다. 자세하고 친절함 심사

이 글에서는 한국학에서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주제에 대해 그것이 자리 잡은 현장 가운데서 전체상을 이해하자는 견해를 개진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한국학 연구가 현재 한국인의 삶이 영위되는 사회 현장과 괴리된 상태에서는 연구자들이 탐구하는 주제와 그 현장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살리기가 힘들 것이다. 물론 모든 한국학 연구자들이 오늘날 사회 현장과 직결된 주제를 선택하여야 하고, 모든 연구 주제를 그것이 놓인 현장 속에서 조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계가 현재 사회의 절실한 문제를 외면하거나 그 본질을 파악하는 데 실패한다면 한국학 연구가 전체적으로 진정성과 충실함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현재 한국 학계와 시민들의 삶이 영위되는 현장의 관계를 필자가 경험한 사례를 통해 상기해 보고자 한다.

2011년 한국사를 비롯한 중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교육과정이 고시된 후 한국 현대사의 전개를 ‘민주주의’라는 개념 위에서 기술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 위에서 기술할 것인가를 두고 큰 논란이 벌어졌다. 학생들에게 현대사를 가르칠 때 해방 후 줄곧 ‘민주주의’의 개념을 써서 교과서를 기술하도록 해 왔고 이때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고시 직전 단계까지 그렇게 정해졌으나, 마지막 고시 단계에서 비정상적 막후 논의를 거쳐 교육과정에 제시된 ‘민주주의’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자유민주주의’로 교체되었던 것이다. 그 두 개념은 2018년에 이르러 역사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되찾을 때까지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핵심 주제가 되었다.

평에 감사드린다. 다만 필자의 힘이 못 미치는 까닭에 그 요구에 다 부응하지 못하고 조선후기의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데 그쳤다. 심사의견에 섞인 일부 오해에 대해서는 연관된 문장을 수정하여 필자의 뜻을 명료히 하고자 하였다.

그런데도 2011년 당시 그 논쟁을 뒷받침할 학문적 성과는 거의 없었다. ‘민주주의론’과 ‘자유민주주의론’의 대립에 연관해서는 헌법에 담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가 냉전시대 반공주의로 이해했던 좁은 의미의 자유민주주의와 동일한 의미의 ‘자유민주적(liberal-democratic)’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지적한 논문을 한 편 찾을 수 있을 뿐이었다.²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기술된 그것과 유사한 구절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끌어다 헌법에 국가체제가 ‘자유민주주의’로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위 논문은 한국 사회 ‘자유민주주의론’의 허구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성과이다. 다만 역사 교육과정을 둘러싼 논란에 앞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이 논문이 학술지에 실려 출판된 것은 논란이 일어난 다음이었다.

대한민국 국체에 대해 사회 곳곳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이게 되는 주제를 법학·정치학·역사학 등 관련된 모든 학계가 도외시하였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한 상황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한국의 이른바 보수 진영은 ‘자유민주주의’가 헌법에 규정된 국가이념이라고 강변하거나 그것을 북한 ‘인민민주주의’의 대척점에 놓을 뿐,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을 명확히 제시한 적이 없었다. 2011년의 역사 교육과정의 논란이 벌어진 다음에 사회 일각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으로 ‘권력에 대한 강한 통제’, ‘강력한 법치주의’ 등 지극히 초보적인 사항들을 거론한 것이 그나마 눈에 띄는 설명이었다.³ 하지만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동하여 왔다. 그것을 내세우는 논의는 거의 예외 없이 평등보다

2 박명림, 「박정희 시기의 헌법 정신과 내용의 해석: 절차, 조항, 개념, 의미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96(2011).

3 「한국 좌파, 자유민주주의(정치체제)와 신자유주의(경제정책) 혼동」, 《조선일보》, 2011년 8월 18일자(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17/2011081702561.html-2019년 3월 15일 확인).

시장의 자유와 경쟁을 강조하고, 헌법상의 평화통일보다 북한에 대한 대결에 치중하고, 복지정책의 확대가 아니라 그것을 비판하는 방향에 있었다.⁴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명확히 정의되거나 설명되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주창하는 사회세력은 정작 그 내용을 분명히 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적 반대파를 향해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세력, 헌법에 반하는 세력이라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다.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었더라면 그것을 함부로 휘두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운 보수 진영이 ‘권력에 대한 강한 통제’, ‘강력한 법치주의’ 등 자신들이 내세우게 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스스로 반하는 존재임을 명확히 드러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학계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논리와 실상에 대한 탐구를 외면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이념적 폭력을 방기하였다. 우리 사회의 연구자들이 한국학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연구 주제들을 얼마나 많이 놓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나아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논란은 연구자들이 탐구 주제의 본질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를 알려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한국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본 모습은 그것을 내세우는 이들의 말처럼 헌법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또한 사회과학 교과서나 학자와 정치가들의 머릿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정체는 현실 사회에서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모습, 즉 시장의 자유를 절대시하고 평등이나 복지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경쟁을 신봉하며 평화통일보다 북한과의 대결에 치중하는 이념과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포장일 뿐이라는 사실 바로 거기에 있다. 개념의 정의와 역사적 변천, 그것을 둘러싼 순수 이론적 탐구는 그것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4 오수창, 「2011 역사 교육과정과 ‘자유민주주의’의 현실」, 『역사와 현실』 81 (2011), 14-15쪽.

우리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본 모습은 무엇보다 정치세력이 대립하고 사회 구성원의 삶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원칙은 연구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를 선택하든 그 사회성과 시대성을 외면하지 않는 한 한국학 연구 전반에 두루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II. 현장 속으로

1. 역사학 탐구의 현장 이해

다산 정약용의 정치사상, 특히 「원목(原牧)」, 「탕론(湯論)」, 「일주서극은편변(逸周書克殷篇辨)」에 표명된 그의 논리는 조선시대 정치의 시대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탈출로로서 일찍부터 주목받았다. '하이상(下而上)'의 정치 질서, 즉 사회 단위의 아래로부터 대표자를 뽑아 올라가 천자를 선출하며, 군주가 무능한 경우 공동체 구성원이 그를 끌어내려 교체할 수 있다는 정약용의 논리는 민주적 정치사상이 구현된 것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정약용이 「탕론」에서 정당화한 방벌(放伐)은 전제군주가 보기에 '폭력을 사주하는 불온사상'이었으며, 정약용의 정치사상은 세부설계나 실행계획을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19세기 농민 저항의 운동 형태를 바탕으로 고도의 상상력이 발휘된 민(民) 주체의 정치제도를 구성하려는 것이었다고 설명되었다.⁵ 정약용이 말한 대로 천자가 신하들의 추천 위에서 고적(考績)에 의하여 선양하는 것은 바로 선거(選舉)와 다름없었을 것이며, 제후를 통한 간접 선거이기는 하나 민이 군주를 선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논의도

5 임형택, 「정약용의 민주적 정치사상의 이론적·현실적 근거: 「탕론」, 「원목」의 이해를 위하여」, 『실사구시의 한국학』(창작과비평사, 2000), 339쪽, 355-358쪽.

있다. 그것은 정약용의 정치사상이 '근대 민주주의의 정치이념'에 접근하였다는 평가로 이어졌다.⁶ 좀 더 자유로운 논의에서는 정약용의 정치사상이 '백성의 의사에 따른 혁명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규정되기도 하였다.⁷ 반면에 전혀 다른 평가도 있다. 「탕론」에 담긴 정약용의 사상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고대 성왕(聖王)들의 왕도를 회복하자는 원론적인 주장이었으며, 유가 본연의 “위민 이념과 민본 이념을 발전시키려”는 생각이어서 왕정을 강화하고 확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한다.⁸ 즉 정약용의 정치사상에서 기존 유교 이념에서 획기적으로 더 나아간 논리를 찾아볼 수 없다는 평가이다.

위와 같이 평가가 엇갈리는 속에서 정약용의 정치사상을 조선시대의 구체적인 현실에 비추어보면 그 성격이 뚜렷이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정약용의 정치사상을 당대의 현실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 현실은 조선왕조 전체의 맥락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탕론」의 논지는 궁극적으로 탕왕이 폭군 걸(桀)을 쫓아낸 것을 정당화한 것이다. 하지만 방법은 정약용이 말하는 바와 같이 먼 옛날의 일이 아니라 조선의 현실이었다. 많은 논저에서 태조 이성계가 공양왕의 '선양'에 의하여 새 왕조를 개창하였다고 기술되었지만, 논리에서나 현실에서나 이성계는 공양왕의 선양을 받지 않았다. 조선 건국 세력들은 이성계의 즉위 형식을 '추대'로 지칭하였으며, 그들 중 고려 국왕의 선양에 의해 이성계가 즉위했다고 표방한 사람은 없다. 나아가 세종은 할아버지 이성계의 즉위가 '정벌(征伐)'에 의한 것이었음을 명확히 하였다.⁹ 권근(權近)이나 이중환(李重煥)

6 조성을, 「정약용의 정치사상: 정치이념을 중심으로」, 『우송 조동결선생 정년기념논총 1』(나남, 1997), 404-405쪽.

7 「『목민심서』 200주년: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인터뷰」, 《중앙SUNDAY》, 2018년 1월 7일자(<http://news.joins.com/article/22263859>-2018년 5월 20일 검색).

8 김영식, 『정약용의 문제들』(혜안, 2014), 40-44쪽.

과 같이 이성계가 선양을 받아 즉위했다는 혼동을 드러낸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왕과 신하 사이를 비롯한 조선 정부 안의 논의에서 선양론을 채택한 사례는 찾을 수 없다.¹⁰

조선시대 두 차례의 반정(反正)도 새로운 왕조의 개창이 아니라 왕조 내부의 국왕 교체라는 차이는 있지만 방벌(放伐)의 내용과 형식을 갖추었다. 특히 중종반정은 명실상부하게 신하들이 모의하여 새로운 왕을 추대하는 과정이었다. 어리석고 포악한 군주는 정벌할 수 있다는 논리, 신하들의 추대, 왕실의 어른인 대비의 승인 등이 결합함으로써 반정이 성립되었다. 반정으로 인해, 종묘와 사직이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당대 정치 주도층에게 설득력을 지닐 수만 있다면 신하들이 국왕을 축출하고 새 국왕을 세우는 일이 조선의 현실 속에서 정당화되었다. 왕실을 지킨다는 충성의 논리로 재위 중인 국왕에 대한 '반역'을 정당화할 수 있었으며, 새 국왕을 세우고 정부를 새로 조직하는 정통성이 누구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냈다. 조선시대의 반정은 왕실 내부에서 국왕이 교체된 일이지만, 이성계의 즉위에서 확인되듯이 왕조 교체의 가능성 또한 상존하는 현실이었다. 반정을 추진한 인물들이 내세운 논리 중에 역성혁명을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있었던 것도 그러한 상황을 보여준다.¹¹ 왕실 내부의 국왕 교체를 넘어서서 왕조 자체를 바꾸는 혁명 역시 역사적, 논리적 실체로서 항상 조선시대 지배층과 함께하였다.

정약용의 정치사상의 근거를 그가 살던 시대의 현실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일찍이 제기되었다. 그 연구에서는 정약용이 '민'을 정치의 주체로

9 『세종실록』, 세종 14년 6월 14일 신축. “上曰, 自古帝王, 揖讓而得天下, 則先奏文舞; 征伐而得天下, 則先奏武舞, 今於太祖奏武舞, 太宗奏文舞可也.”

10 오수창, 「조선왕조 개창의 형식과 논리: 禪讓論과 추대 사실의 검토」, 『東方學志』 176(2016), 99-103쪽, 109-111쪽.

11 李廷馨, 「東閣雜記」 上, 『大東野乘』(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떠올린 현실 기반이 민중과 민중운동이었다고 하면서 「탕론」, 「원목」에 관철된 '하이상'의 원칙이 그런 운동과정에서 촉발되고 그 실현 가능성까지도 내다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¹² 그러나 정약용의 사상과 현실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그 사상에 당시 민중 세력의 성장에 반하는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정약용이 제기한 군주 교체의 논리는 위에서 설명한 조선시대 반정의 현장과 연결되지 못하였다.

정약용이 가(家)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우두머리를 뽑아 올라간다고 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주장이지만 핵심은 역시 재위 중인 군주의 교체에 있다. 정약용이 제시한 군주교체 방식은 쿠데타로 진행된 반정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약용은 사회의 어떤 구성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군주를 교체할 것인지, 군주교체의 형식과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한 바 없다. 그가 정당화한 탕왕 역시 군사력을 동원하여 군주 지위를 차지하였다. 중종반정이나 인조반정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인사들이 권력욕을 바탕으로 움직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약용이 말하는 군주교체와 조선시대 반정 사이에 건너지 못할 차이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권력욕이 작동하지 않는 군주교체를 말하는 것은 현실의 논리일 수 없으며, 만일 정약용이 권력욕을 배제하고 군주교체를 논했다면 그의 정치사상은 그것만으로도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정약용의 정치사상에 대해 복잡하고 정교한 해석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그것들은 대개 철학적 논리 자체에 치중하거나 중국 고대의 역사적 사건들과 연관하여 구성되었었다. 그에 비해 조선시대에 반정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군주교체는 엄연한 현실이었다.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조선의 정치가 수행되던 현장을 들여다본다면 조선의 정치와 정치질서는 지금

12 임형택(2000), 앞의 책, 348-356쪽.

까지 정약용의 정치사상을 설명해 온 구도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대비의 명령, 그리고 사대부 사이에서 적어도 반대파의 목소리를 봉쇄할 정도의 합의 위에서 군주의 축출과 추대가 합법화되고 정당화되던 조선의 정치 현장은 군주교체의 정당성을 원론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친 정약용의 정치사상보다 더 나아가 있었다.

현실에 기반을 둔 연구자 자신의 문제의식과 연구대상이 되는 현장 사이의 긴장 관계는 수없이 논의되었으면서도 모두 동의할 만한 명쾌한 정답을 구하기 힘든 주제이다. 그러나 연구자가 자리 잡은 오늘날의 현장이 중요하다라는 것과 연구대상이 놓인 현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으며 연구자가 함께 추구해야 할 사항이다. 어떤 경우에도 연구대상이 자리 잡은 현장을 외면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며, 연구대상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 연구자의 현실적 문제의식 또한 제대로 구현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위험성을 지방사·지역사 연구와 연결시켜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한다. 오늘날 지방사·지역사 연구에서는 ‘전체로서의 지방 공동체’에 대해 그 기원, 성장, 특징적인 개성을 연구하고 나아가 ‘자기충족적’ 공동체가 해체되어가는 과정까지도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¹³ 근대 국민국가 중심의 역사이해를 극복 또는 보완하려는 목적을 지니는 동시에, 지방자치 즉 지역민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앞세우는 현실적 과제를 바탕으로 한 문제의식이다.

중앙이나 국가를 전제할 때 묻혀버릴 수 있는 지방의 현실을 재구성하려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후기에서 근현대로 이어지는 시기에 국민국가의 건설이 사회 변화의 중요한 초점이 된다는 사실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 근대는 국토 전 지역의 균형적이고 상호

13 허영란, 「지방사를 넘어, 지역사로의 전환: 한국 근대 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새로운 모색」, 『지방사와 지방문화』 20-2(2017), 360-363쪽 참조.

보완적인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국가의 형성을 하나의 지표로 삼기 때문이다. 서유럽의 역사를 바탕으로 구성된 근대상에 매몰되지 않고 한국사의 특징과 개성을 충실히 추구한다 할지라도, 조선후기 이후의 역사 전개에서 국토 전 지역의 균형적이고 보완적인 발전을 통한 국민국가의 형성과 구분되는 다른 길을 설정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조선후기 이후 지방사 연구 또한 그러한 사회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는가를 규명하는 과제를 우선시하지 않을 수 없다. 전근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지방사·지역사를 연구하면서 각 지방·지역의 완결성과 독자성에 치중한다면,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대의 과제에 매몰되어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시기의 과제와 그 과제가 수행되는 현장을 온전히 규명하지 못하는 오류에 빠질 것이 우려된다. 연구대상이 자리 잡은 현장은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며 그것에 충실할 때 연구자의 현실적 문제의식 또한 올바른 연구성과를 산출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2. 문학 작품의 현장 이해

역사학 연구자로서 외람되지만 문학 작품의 이해에서도 현장이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춘향전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그동안 춘향전 연구는 그 작품에 담긴 진보성을 확인하려는 의도에 충실한 경우가 많았다. 의도 자체는 동의할 만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괴리된 설명으로 연결되었다. 춘향전의 진보성을 강조하는 논의들은 사또가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고 요구한 것이 정당했다고 보는 논리 위에서 있었다. 사또의 수청 요구가 제도적으로 정당해야만 춘향의 투쟁이 권력자 개인의 불법에 대한 저항을 넘어 조선시대 신분제 자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관리의 기생 동침은 『대명률』이나 세종의

명령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원천적으로 불법이며 처벌의 대상이었다. 조선후기에는 금지와 처벌의 규정이 『속대전』을 비롯한 최고 법전에도 명기되었다. 위반 사례에 비하면 지극히 드문 일이었겠지만 실제 처벌도 이루어졌다. 만일 관리가 휘하 기생에 대해 동침을 강요하는 것이 합법이었다면 조선은 제도적이고 공식적으로 '성노예'를 운영한 국가가 될 것이다. 성리학을 기본이념으로 내세운 나라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관리가 기생을 유린하는 일이 일상에서 아무리 흔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법률과 제도의 현실은 그것대로 의미를 지닌다. 더구나 조선후기 신분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구축해 가는 과정이 어땠는가를 이해하려 할 때 그 시대의 법과 제도를 정확하게 읽는 일은 더없이 중요하다. 수령의 수청 요구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춘향의 거부 행위나 그 논리에서 시대적 의미를 찾는 논의는 조선후기 법률과 제도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나아가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춘향전이 전개되는 작중 현장을 소홀히 함으로써 춘향의 저항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도식적으로 평가하고 마는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오류는 우선 춘향전이 낡은 질서를 지키려는 지배층의 선전물이었다고 평가하는 연구자들에게서 나타난다. 춘향의 저항 자체에 진보성을 부여하는 연구가 학계의 주된 흐름이지만 그 정반대편에 춘향전의 사회적 성격이 조선시대 정렬(貞烈) 이념의 재강화에 있을 뿐이라는 주장도 끊이지 않는다. 그와 같은 주장들은 춘향이라는 최하층민 여성이 국가권력을 상대로 목숨 걸고 감행하는 투쟁, 그것이 매우 생생하고 급박한 모습으로 독자들 앞에 펼쳐지는 투쟁의 현장을 무시한 것이다. 그리하여 전근대에 문학 작품을 포장하던 정렬(貞烈)과 같은 관념적 연사를 춘향전의 본질적 메시지로 보는 오류에 빠지고 말았다.

한편 춘향의 저항에 시대적 의미를 부여하는 쪽에서는 그 저항의 기반을

춘향의 '남다른 자아의식' 등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춘향 투쟁의 원동력과 본질 또한 작중 현장에 숨어있다. 예를 들어 춘향이 광한루에서 이도령을 처음 마주하는 장면에 대한 학계의 일반적인 설명은 춘향이 독립적인 자아의식 위에서 이도령의 구애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장면의 진실은 기생 춘향이 이도령의 구애를 받아들여 낯에 대한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낸다는 것이다. 『열녀춘향수절가』의 경우, 춘향은 이도령에게 “한 번 탁정(託情)한 연후에 인하여 버리시면 일편단심 이 내 마음 독수공방 홀로 누워 우는 한은 이내 신세 내 아니면 누구일꼬 그런 분부 마옵소서.”라고 말한다. 그 결과는 이도령이 ‘금석뇌약(金石牢約)’을 맺는다는 말로 춘향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에 따라 춘향이 방자를 시켜 자기 집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것이 기생 춘향의 현실이었다. 작중 현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춘향이 이도령의 구애를 거절했다든가 남다른 자아의식 위에서 기생 신분을 부정했다는 평가가 춘향전의 진실로부터 벗어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춘향과 이도령이 사랑을 나누는 노골적인 장면도 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그 장면을 두고 지배층의 피지배층에 대한 무자비한 가학행위라고 설명한 연구도 있다. 하지만 작품 속 현장으로 들어가 차분히 검토해보면 그것이 두 인물의 사랑을 적실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춘향과 이도령은 독립되고 안전하며 깨끗이 정리된 그들만의 공간에서 제삼자의 개입이나 방해 없이 사랑을 누렸다. 사또 자제와 기생이라는 근원적인 신분 격차는 피할 수 없었지만, 그 테두리 안에서는 최대한 평등한 관계를 맺으며 두 사람 사이의 끊임없는 소통과 합의 위에서 사랑 장면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춘향이 신관사또에 대항해 필사적인 항거를 벌이는 계기 또한 남다른 자아의식이나 낡은 정열 이념과 같은 상투적 도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항거의 계기는 사또와 춘향이 대면한 현장 속에서

확인된다. 신관사또가 춘향을 끌어다 앉힌 후 자신의 책걸을 불러놓고 그를 한낱 구경거리로 삼아 모욕을 가했다. 특히 이 장면은 모든 한글본에서 빠짐없이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도령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결국 구관은 보내고 신관을 맞이하는 평범한 기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던 춘향이 격렬한 저항의 길로 나선 중심 이유는 신관사또가 춘향에게 심한 모욕을 가하는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¹⁴

3. 현장 자체의 의미

위에서 역사학과 문학 연구의 사례를 들어 탐구대상이 자리한 현장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제 그 현장이 주로 지식인들이 산출한 말과 글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한국학은 현장보다 지식인의 '말과 글'에 치중하여 논리를 구성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경향은 학문 활동의 주체가 지식인인 이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사와 같이 전해지는 사실 거의 모두가 지식인의 말과 글에 의해 재구성된 연구대상의 경우 현장과 지식인의 말과 글을 구분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또 말과 글이 대표하는 인간의 지적 영역 또한 삶이 영위되는 현장의 일부이므로 그것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말과 글 자체의 논리성을 살피는 데 목적을 둔 연구는 그것대로 중요하다. 그러나 개인이 의식적으로 남긴 '말과 글'로는 사회의 전체상은 고사하고 그것을 남긴 인물조차 온전히 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 인물의 행동과 삶의 궤적에는 그가 남긴 말과 글로부터 구분되는 독자의

14 오수창, 「조선의 통치체제와 춘향전의 역사적 성취」, 『역사비평』 99(2012); 오수창, 「춘향전에 담긴 저항의 원동력과 필연성」, 『한국사론』 63(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17) 참조.

비중과 의미를 지니는 부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분적으로라도 시대성과 사회성에 관심을 둔 연구라면 어떤 인물의 환경과 실천, 그를 둘러싼 더 넓은 현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눈길을 현실로 돌려 살펴보면 그 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 각 부문의 체질을 바꿔놓게 되는 1997년의 외환위기,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정치·사회적 운동과 근본적 성찰, 2016년 가을 이후의 ‘촛불’과 그로 인한 사회 변화 등은 지식인 개인의 말과 글을 통해 온전히 예견된 적이 없고, 지식인의 말과 글로 구성된 연구대상이 아니다. 그러한 사건과 사회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식인의 말과 글을 넘어서 세상이 돌아가는 현장을 직접 들여다보아야만 할 것이다. 사회 구성원의 삶의 현장이 지식인의 말과 글로부터 구분되어 작동하던 상황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학문의 ‘실사구시(實事求是)’를 강조하고 그 전통을 조선후기의 실학에서 찾는 논의가 한국학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의 학술사·정신사에서 정치 이데올로기의 허위성과 학술의 관념적 공소성을 실사구시로 비판·극복하고 전통, 그리고 근대세계로 향한 개방과 개혁의 자세를 실사구시로 대변했던 사실을 유의해서 체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¹⁵ 하지만 위의 정약용의 정치사상 검토에서 드러났듯이 실학을 연구하는 경우에도 실사구시란 대개 사상가가 자기 시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반영하려 했는가 하는 차원에서 추구되었지, 사상가와 그 사상 자체를 더 넓은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이해하는 실사구시에는 미흡한 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있다. 즉 우리 학계는 실학의 문제의식과 학문적 논리에 담긴 실사구시에는 매우 주목했지만, 실학이 놓여 있던 그 시대의

15 임형택(2000), 앞의 책, 49쪽.

드넓은 현장, 혹은 실학과 사회가 맺은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다. 연구 대상의 전후 시대를 포괄하는 역사적 현장과 당대 사회의 실상에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갈 때 실사구시의 진면목을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장에 충실한 연구를 하는 데는 위험성이 따른다. 여기저기 개별적인 현장을 뒤쫓다가 이론의 구성과 검증에 소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 뿌리박지 않은 이론화는 어차피 사상누각이다. 현장과 이론 중에서 현장을 선택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라, 현장을 포섭하고 그것과 일체화된 이론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¹⁶

16 이 발표에 대한 토론에서 김형찬은 철학사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학자들의 도전과 성취가 그들 각각이 당면했던 현실의 문제에 대응하는 데 기여했고, 그것이 이후 한국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유의미한 것으로 인정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즉 원효가 중관과 유식의 대립을 넘어 화쟁의 길을 열고, 지눌이 선종과 교종의 갈등을 넘어 정혜쌍수와 돈오점수의 방안을 제시했던 것은 당시 불교계가 당면한 문제와 대안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공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원효나 지눌과 마찬가지로 퇴계가 성리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도덕이상국가를 만들 방안을 찾으려 한 것, 율곡이 지식인 관료를 통해 성리학 국가 조선을 재건하려 한 것, 다산이 천주교라는 새로운 사상의 관점으로 조선에서 유학의 정신을 재해석해 내려 한 것도 모두 현실의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였고, 그 근본적인 모색의 수준이 이른바 '철학'이라는 근대의 학문 영역에서 다뤄지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그들이 취한 방법은 당대의 현실에서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지식을 동원하여 이론적 현실적 대안을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편 그들이 당대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대에 이용할 수 있는 지적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한국적 전통보다는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온 지식들이었음이 강조되었다. 김형찬, 「대문명전환기의 한국학」 토론, 『한국학중앙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학술대회 대문명전환기의 한국학: 새로운 100년을 위해』(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78-79쪽.

Ⅲ. 개인과 사회의 전체상 파악

개인이든 사회든 그 특정한 일면을 돋을새김하여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론을 다시 논의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도 그런 오류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왕 정조는 군주로부터 신민에 이르기까지 보편적 ‘리(理)’를 기준으로 한 유학적 이상을 추구하였으며, 사대부의 공론을 중시하던 군신공치(君臣共治)의 전통을 배경으로 군신관계와 그의 정책들을 탄생시켰다고 설명된다. 그가 남긴 「만천명월주인옹자서(萬川明月主人翁自序)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설명이다. 하지만 정조는 정색을 하고 내린 하교에서, “비록 남편이 어질지 못하더라도 여자가 정절을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이 임금이 비록 무례하다고 하더라도 신하는 충성하여야 한다.”고 했다. 군신공치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정조는 신하들이 쓰는 문체가 순정하지 못하다 하여 가혹할 정도로 간섭하면서도 자신은 비속한 언설을 구사하고 비밀스러운 정치 공작을 벌였다.¹⁷ 그것이 그의 정치력과 업적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조의 세련된 저작과 마찬가지로 그가 취한 행동이나 일과성 명령 또한 그의 정치이념을 구성한다. 연구자들이 정조의 일상적인 정치행위는 소홀히 하고 ‘만천명월주인옹자서’와 같은 세련된 저작들을 중심으로 그의 사상과 이념을 이해하는 것은 정조의 전체상에 대한 균형 잡힌 설명이라고 평가하기 힘들다.

정약용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구상했다는 ‘민주적인 정치질서’를 설명하려면 그가 드러낸 사족으로서의 계층의식도 함께 다루어야

17 오수창, 「오늘날의 역사학, 정조 연간 탕평정치, 그리고 19세기 세도정치의 삼각대화」, 『정조와 정조 이후』(역사비평사, 2017), 172쪽.

하고, 그가 정당화한 군주교체의 논리를 강조하려면 그가 현실 국왕과 군주체제에 보인 집착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연구대상이 되는 개인이 말과 글, 그리고 행동 사이에 완벽한 정합성을 지닐 수는 없으며 억지로 정합성을 구성해서도 안 된다. 모순이 있으면 그 모순을 인정하면서 전체상을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조선시대사 연구에서 당대인들의 세계인식, 구체적으로 화이론(華夷論)과 그 극복에 대한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신생 제국 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겪게 되는 이념과 사회질서의 혼란, 고비를 넘을 때마다 새로 나타나는 난제들을 극복해가는 지식인들의 분투, 정교하기 이를 데 없는 논리 구조와 그 변용들은 현대의 많은 학자를 조선후기 화이론을 규명하는 작업으로 이끌었다. 그런데도 20세기를 넘어서도록 한국인의 의식세계에서 화이론은 말끔히 해결되지 않았다. 어차피 한 시기의 사상이 논리적으로 완전히 해명되어 청산되는 방식으로 극복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게다가 지식인의 말과 글은 앞에서 확인했듯이 사회를 구성하는 일부분에 그친다. 민중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화이론은 당대 지식인들이 논하던 것과 상황이 매우 다르다. 1812년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을 때 봉기 초반에 뿌린 반란군의 격문에는 “정진인(鄭眞人)이 황명(皇明)의 세신유손(世臣遺孫) 철기십만(鐵騎十萬)을 거느리고 동국(東國)을 숙청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구절을 바탕으로 홍경래의 난에서도 화이론의 세계관이 계속 작동하였다고 설명되었다. 하지만 봉기군이 고대하던 원병은 이름하여 ‘호병(胡兵)’이었다. 최고지휘자인 홍경래는 반란이 처음 일어날 때부터 중국에 가서 성장한 정진인(鄭眞人)이 호병(胡兵)을 이끌고 와서 조선을 쓸어버린다고 선전하였다. 황명의 세신유손이 아니라 그것과 정반대 되는 오랑캐 군대가 동맹군 내지 구원병으로 설정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홍경래의 난 전체에 일관된 논리여서, 봉기군은 정주성에 고립되어 있을 때도

압록강에 주둔한 호병이 구하러 온다는 데 희망을 걸고 있었다. 격문에 명의 후예들이 구원하러 올 것이라고 쓰인 것은 주모자 중에서 체제에 가장 깊숙이 발을 들인 진사 김창시가 개인적으로 기술한 구절이었을 뿐, 반란 전체의 이념과는 반대되는 내용이었다.¹⁸ 조선후기 국가와 사회를 떠받치고 있던 화이론은 19세기 초 나라를 뒤흔든 반란의 현장에서 간단히 부정되었다. 반란의 현장에서 화이론이 부정되었다는 사실이 지니는 시대적·사회적 의미가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말과 글로 복잡하게 전개되던 화이론의 논의보다 무게가 작다고 볼 이유는 없다. 화이론의 시대성과 사회적 의미는 지식인들의 말과 글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평을 폭넓게 검토할 때 사실대로 드러날 것이다.

어떤 주제를 연구할 때 전체적인 논리를 추구하지 못하고 일면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조선시대 국왕에 대한 문제의식을 예로 들 수 있다. 조선후기 정치사에 대한 연구에서는 강력한 국왕권의 확립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자들은 왕권의 강화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당시 정치 질서를 서술하고, 왕권의 강화를 국정의 정상화로 평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판단된다. 그것은 강력한 국왕권이 수립되어야 집권 사대부나 지방 토호들의 기득권을 제한하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켜줄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있다. 과거 국가 운영에서 국왕이 가장 강력한 변수였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정치를 서술하고 평가하는 데 국왕을 중심으로 삼는 것은 조선시대 당시인들이 정치를 바라보던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군주체제가 빠지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함정은 폭군의 출현이다. 연구자들은 국왕이 강력한 권한과 권위로 민을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기대하지만 현실에서 왕권의 강화는 당대 정치이념과 질서를 무시하는 폭정으로 이어

18 오수창, 『조선후기 평안도 사회발전연구』(일조각, 2002), 284쪽, 329쪽.

지고 국가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더 큰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 조선의 정치체제는 국왕 견제에 유의하였다. 그와 같은 정치질서의 일반적 경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조선후기 국왕권의 강화를 이상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당대의 정치질서나 정치집단을 비판하는 논리는 전체상을 두루 조망하는 균형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한국학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지식인의 말과 글에 너무 큰 비중을 두던 경향에서 벗어나, 개인의 지적 활동과 실제 삶의 궤적, 사회 구성원 전체의 행동과 인식, 연구자의 희망을 넘어서 현실의 논리를 종합함으로써 전체상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IV. 토론 활성화

지금까지 한국학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대표적인 논의는 문·사·철의 통합학문을 수립하자는 제안이었다. 한국학이 분과학문으로 진행되는 한 심원하고 포괄적이며 학제적인 자기 사유가 양성되기 어려우며, 그 결과 타자의 사유를 수입하여 한국학에 적용하는 방식의 연구가 지속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에는 통합학문의 성격을 지니는 실학의 전통이 있으며 실학이 취한 통합적 학문방법을 계승하면서 그것을 근대적인 방향으로 전환한 ‘국학’이 그랬듯이 그러한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갱신하여 현대 학문의 성과와 변증법적으로 융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실이 하나의 총체적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통합 인문학’으로서의 한국학이야말로 학문적 실천성의 강화를 이루게 된다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다.¹⁹⁾

하지만 '통합인문학'의 수립은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위 논자가 스스로 지적한 대로 학계의 기득권 수호 노력, 학과 이기주의 내지 전공 이기주의라는 벽에 부딪쳐 희망사항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하지만 문제는 더 근본적인 데 있다. 근대 학문이 이룩한 분과학문의 전문성은 그것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통합인문학의 가치를 앞세울 때 오랫동안 힘들여 쌓아온 분과학문의 전문성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문·사·철의 통합을 강조하기보다는 한국학 연구자들이 인접 분야의 기초적인 식견을 가지자는 논의가 좀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유학 연구에 대한 제안이지만 “각 분야의 연구자들이 어느 정도 철학·사학·사회과학의 이론사와 방법론에 관한 기본 식견은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¹⁹ 한국학계에 던져진 '통합인문학'을 수립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철학·사학·사회과학뿐 아니라 문학과 예술사 등에 대해서도 기본 식견을 갖추자는 원론을 대안으로 삼고자 한다.

한국학 연구자들이 '통합인문학'을 수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과 본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지향하는 바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 지금 수행해야 할 우선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는 학계의 토론문화를 활성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위에서 말한 현장에 대한 충실한 접근과 전체상의 구성은 연구자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연구자들의 협업과 토론일 것이다. 근래 '통섭'과 '융합'이 강조되는 가운데 연구자들의 협업은 두루 권장되며 연구

19 대표적인 논의로 박희병, 「통합인문학으로서의 한국학」, 『21세기 한국학, 어떻게 할 것인가』(푸른역사, 2005), 52-63쪽.

20 유초하, 「현실과 소통하는 한국학의 정립을 위한 예비적 시론: 한국유학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14(2009), 19-20쪽.

자가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사례도 더욱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견해가 서로 다른 연구자들 사이의 토론을 활성화하는 데 대해서는 새로운 움직임을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학뿐 아니라 한국의 학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술단체와 학술회의는 난립하고 학술지는 부지기수지만, 학계의 공론장이 사라진 지는 꽤 오래다. 비대해지는 것은 대학과 학술기구들뿐이다.”²¹라는 지적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국학 분야에서도 근래 토론은 지극히 침체되어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한국 사회에서 그나마 토론이 이루어졌고 그 토론과 논쟁을 소략하게나마 정리하려는 노력도 있었다.²² 2000년대 이후로 한국학 분야에서 토론다운 토론은 증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에 있다.

학계의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에서 지적한 대로 한국학자들이 문학·사학·철학 등의 기본 식견을 갖추도록 교육과 훈련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는 분과학문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예를 들어 역사학 연구자와 다른 분야의 연구자가 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채워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역사학의 학문적 특징은 연구 주제로 선정된 대상에 대해 그 사회적 성격과 시대적 성격을 설명한다는 데 있다. 역사 속에서 전개되는 어떤 상황을 연구한다고 할 때, 그것이 앞뒤 시기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같은 시대 다른 사회와는

21 류준필, 「소실된 ‘근대성’과 왜곡된 ‘한국학’을 넘어서」, 『창작과비평』 39-2(2011), 412쪽.

22 예를 들어 중앙일보사 편, 『80년대 한국사회 대논쟁집』(월간중앙 1990년 신년호 별책부록). 학계의 논쟁을 중심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한길사 편, 『80년대 사회운동논쟁』(한길사, 1989); 한길사 편, 『90년대 한국 사회의 쟁점』(한길사, 1990)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지를 설명할 기준이 서 있지 않다면 그 상황에 대한 평가는 자의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군주의 권력 행사를 평가할 때 앞뒤 시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른 사회의 군주권과 어떻게 대비되는지 준거점을 마련하지 않고 그 상황에 대해 자의적인 평가를 한다면 독자에게 설득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역사 속에 자리 잡은 젠더 문제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앞뒤 시기의 사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같은 시대 다른 사회의 젠더 관계에 비해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대비시키지 않는다면 그 시대 남녀 관계에 평등성이 두드러진다고 강조하든 야만적인 차별이 행하여졌다고 비판하든 설득력을 지닐 수 없다.

처음부터 사회성이나 시대성과 동떨어진 개념 위에서 역사적 상황을 논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권력욕 그 자체를 가지고 특정 시대의 정치를 설명하고 그것이 역사 서술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전형적인 오류이다. 권력욕은 인간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요소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정치의 역사적 성격을 설명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그와 같이 역사학의 기본 성격을 익히지 않은 연구자들이 어떤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논한다면 자의적인 평가가 넘쳐나게 마련이다.

위와 같은 사정은 필자가 역사연구자로서 느끼는 바이지만, 문학이나 철학의 기본 성격을 익히지 못한 역사학자가 문학 작품이나 철학적 주제에 대해 논할 때 그 분야의 연구자들 또한 벽을 마주한 듯한 답답함을 느낄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답답함이나 분노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쓴소리를 주고받으며 공통 기반을 넓혀나가는 데 있다.

각 분야의 한국학 연구자들이 서로 토론을 진행할 만한 학문적 기반을 공유한다 하더라도, 토론이 극도로 위축된 학계의 상황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현실적 문제가 남는다. 그동안 연구재단이 마련하고 주도해 온 학술지의 논문 심사와 학술지 자체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이미 많이 논의되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투고 논문을 평가하는 범주이다. 발표자가 접해본 논문 심사의 평가 범주들은 논제의 독창성, 논지 전개의 논리성, 분석의 정밀성, 학계에 대한 기여도 등 모두 개별 논문의 완결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 이런 평가 틀에서는 학계에 대해 도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토론을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여는 논문은 설 자리를 찾기 힘들다. 심사자들에게 트집잡힐 여지를 남기지 않는 무난한 논문만이 양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새롭지 않다.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거나 학계의 대화를 촉진하는 면모가 높지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심사의 평가 범주를 수정하고 평가 항목의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고쳐나가야 할 것으로 한국 학계의 학술대회 운영방식을 들고 싶다. 오늘날 한국학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할 자리가 양적으로 적은 것은 아니다. 대학과 학회, 연구소의 학술대회가 이어지지만, 실상 주최자들은 최소한의 청중을 확보하기 위해 고심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술 모임의 기회가 적고 연구자 개인의 전문화가 높지 않았던 시절, 특히 학술단체가 연구자 공동체의 성격을 강하게 지녔던 과거에는 일반적인 논문 발표에도 많은 청중이 참여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특별한 쟁점이 부각되지 않는 학술모임이라면 관련자 극소수만 관심을 가질 뿐이다. 이미 많이 지적된 사항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토론이 실종된 학술대회 운영에 대해서 학계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 정약용 연구를 예로 들면, 그 생애와 학문에 대한 학술대회가 끊임없이 계속되지만 주류적 연구 경향에 반대되는 학자들까지 불러 모아 치열한 토론을 벌인 사례는 들어볼 수 없었다. 앞으로는 학술지에 글로 발표하면 될 논문과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와 토론을 벌여야 할 연구성과를 구분하여 학술대회는 후자에 해당하는 발표로 채울 필요가 있다. 발표자 개인의 주장이 지루하게 나열되는 내부 관련자

들만의 대화가 아니라, 열띤 비판과 토론을 통하여 논의의 단계를 높여 나가는 학술대회 운영은 학문 후속세대를 교육하는 효과도 크게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인 토론이 중심이 되는 학술대회와 함께, 서평과 학술논쟁의 터전이 될 전문 학술지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 오늘날 한국학계는 연구성과를 발표할 지면이 모자란 상태는 아니다. 이름 있는 학술지조차 게재 논문을 구하기 위해 왕왕 두고 기한을 늘려야 하는 형편이다. 일반적인 서평을 실는 것은 물론 개별 논문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학계의 쟁점에 대한 토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면이 필요하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안은 지엽에 그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따로 있다는 사실은 더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그것은 연구자 개개인이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이들과 열린 마음으로 논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토론문화의 진작이다.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먼저 한국학을 탐구할 때 연구대상이 되는 주제와 시대의 현장에 충실하고, 연구대상이 개인이든 사회든 그 전체상의 구성을 지향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현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6-2017년 대한민국 전역에서 일어난 광장의 촛불은 앞으로 남북한 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2차 대전 이후 냉전체제의 마지막 국면을 해체한다면 명실상부한 혁명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정치 지도자나 사회운동가, 아니면 사상가들의 논리에 의해서 기획되지 않았다. 연구자들

은 상황을 뒤쫓아 가며 학문적 논리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친 형편이다. 과거 역사와 문화의 전개 또한 다르지 않았을 것이며, 미래 또한 그러할 것이다. 학문을 연구하는 이들이 지식인과 사상가들의 인식과 논리, 즉 말과 글에 일차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며 자신들의 연구 행위 자체가 말과 글의 완결성을 지향한다. 하지만 연구자들의 연구 자체와 연구대상이 되는 말과 글이 놓인 공간적·시간적 현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연구대상에 대해 시대적, 사회적 성격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장에 충실한 전체상을 구성하는 과업은 각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개별 연구성과들을 학계의 집단적인 성과로 묶어낼 방안으로 토론 활성화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학문적 관심과 성향이 서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작은 차이를 두고 토론하는 모임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일반 청중이 참여하는 학술대회만은 서릿발 같은 논쟁이 오가는 토론장이 되도록 학계의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 교육과 개별 연구의 수행, 국내외 한국학 연구의 지원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이끌어 나갈 때 진정한 중앙을 표방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현장과 전체상에 충실하고 토론문화를 진작할 것을 강조한 것은 한국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었다. 한국학계는 이 글의 논의를 뛰어넘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근래 강고한 뿌리가 흔들리는 남북관계와 동북아 국제질서, 인공지능이 초래할 예측 불허의 문화 재편, 암호화폐로 관심을 집중시킨 정보기술의 발달 등 전방위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학의 의미와 방법은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격렬히 제기된 페미니즘과 젠더 담론

또한 한국학계에 전대미문의 난제를 제기했다.

미투운동이나 페미니즘이 요구하는 삶의 자세와 사회질서는 논리적으로 이미 오래전에 완성되었다고 생각한다. 근대에 들어와 남녀평등의 논리가 확립되고 평등한 투표권이나 교육기회 등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었다. 그런데도 남녀평등의 논리는 아직 현실화하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근대 이전의 성리학에도 남녀차별의 근원적이고 정합적인 논리는 있을 수 없었다. 성리학의 남녀차별은 그 사상에 남녀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없음에도 실제로는 온갖 비유를 끌어다 차별을 자행하였다는 현장의 폭력성에 본질이 있다. 따라서 성차별이나 젠더 담론 또한 말과 글로 정리된 논리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성차별·성평등의 문제 앞에서 지금까지 한국학계의 중심 주제가 되어 온 전근대와 근대의 구분은 의미를 잃게 되며, 연구자들은 말과 글의 완결성을 전제로 하는 논리에서 벗어나 현장에 더욱 집중할 것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했지만 한국학은 이즈음의 젠더 담론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완전히 새롭고 다양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연구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영식, 『정약용의 문제들』. 해안, 2014.
- 오수창, 『조선후기 평안도 사회발전연구』. 일조각, 2002.
- 임형택, 『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비평사, 2000.
- 중앙일보사 편, 『80년대 한국사회 대논쟁집』. 월간중앙 1990년 신년호 별책부록, 1990.
- 한길사 편, 『80년대 사회운동논쟁』. 한길사, 1989.
- _____, 『90년대 한국 사회의 쟁점』. 한길사, 1990.

2. 논문

- 류준필, 「소실된 '근대성'과 왜곡된 '한국학'을 넘어서」. 『창작과비평』 39-2, 2011, 409-412쪽.
- 박명림, 「박정희 시기의 헌법 정신과 내용의 해석: 절차, 조항, 개념, 의미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96, 2011, 109-139쪽.
- 박희병, 「통합인문학으로서의 한국학」. 『21세기 한국학, 어떻게 할 것인가』, 푸른 역사, 2005, 43-65쪽.
- 오수창, 「2011 역사 교육과정과 '자유민주주의'의 현실」. 『역사와 현실』 81, 2011, 3-15쪽.
- _____, 「조선의 통치체제와 춘향전의 역사적 성취」. 『역사비평』 99, 2012, 341-372쪽.
- _____, 「조선왕조 개창의 형식과 논리: 禪讓論과 추대 사실의 검토」. 『東方學志』 176, 2016, 93-119쪽.
- _____, 「춘향전에 담긴 저항의 원동력과 필연성」. 『한국사론』 63,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17, 335-367쪽.
- _____, 「오늘날의 역사학, 정조 연간 탕평정치, 그리고 19세기 세도정치의 삼각대화」. 『정조와 정조 이후』, 역사비평사, 2017, 204-234쪽.
- 유초하, 「현실과 소통하는 한국학의 정립을 위한 예비적 시론: 한국유학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14, 2009, 5-32쪽.
- 조성을, 「정약용의 정치사상: 정치이념을 중심으로」. 『우송 조동걸선생 정년기념

논총 1』, 나남, 1997, 394-412쪽.

허영란, 「지방사를 넘어, 지역사로의 전환: 한국 근대 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새로운 모색」, 『지방사와 지방문화』 20-2, 2017, 347-379쪽.

국문초록

오늘날 한국학의 활로를 개척하는 방안으로 연구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를 재검토하였다. 한국학 연구자들은 연구대상을 그 시간적·공간적 현장 속에서 탐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약용의 정치사상은 조선후기 정치사상의 신기원을 연 것으로 이해되지만, 조선왕조 개창, 반정의 현장은 그의 사상보다 더 나아가 있었다. 지방사·지역사 연구의 경우 주민공동체의 전통도 중요하지만 국민국가의 형성이라는 당대의 현장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문학 연구에서도 춘향이 이도령을 만나고 사랑을 나누는 현장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의 통설이 춘향전을 관념적이고 상투적인 틀 속에서 이해했음이 확인된다. 개인이든 사회든 그 특정한 일면을 돌을새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오류를 극복하여야 한다. 특히 지식인들의 말과 글은 사회를 구성하는 일부분에 그치므로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전체상을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체상을 지향할 때 지금까지의 설명과 다른 면모가 확인될 사례로 정조와 정약용의 정치사상, 조선후기의 화이론, 조선시대 국왕의 권한 등을 들 수 있다. 한국학의 총체성은 근대 학문이 이룩한 분과학문의 전문성을 살리는 바탕 위에서 추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연구자들은 이웃 분야의 기본 식견을 공유한 위에서 토론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학술지의 논문 심사에서도 발췌적 문제 제기와 논쟁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야 하며, 학술대회를 논쟁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론과 논쟁 중심의 학술지를 운영할 필요도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학계의 토론과 논쟁을 이끌어야 중앙을 자처할 수 있다.

투고일 2019. 4. 15.

심사일 2019. 4. 23.

게재 확정일 2019. 5. 27.

주제어(keyword) 한국학(Korean Studies), 현장(Specific Scenes), 정약용(Jeong Yag-yong), 전체상(The Whole Picture), 토론(Discussion)

Abstracts

Suggestion for Korean Studies Faithful to the Scenes of Life and the Overall Picture

Oh, Soo-cha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specific problems of the field where scholars are researching Korean Studies. It would be one of various efforts to find a new path of Korean Studies. It can not be overemphasized that Korean researchers should explore the subject in the temporal and spatial context. Jeong Yag-yong's political thoughts are considered to have opened a new era beyond the medieval limits. But, as confirmed by two cases of Banjeong(The Restoration of the Righteous King), the realities of Joseon's politics were more advanced than the idea of Jeong. Although the traditions of all provinces and towns are important, it seems to be more important that the studies of regional history in the late Joseon period should be conducted in the context of the construction of a unified national state. In the field of Korean literature, when we look into the place where Chunhyang and I-doryeong first met and loved, It is revealed that the conventional explanation of Chunyang-jeon have understood the novel in a stereotyped and outdated framework. The researches of Korean Studies have placed too much importance on the words and writings of intellectuals. Scholars should make efforts to build the whole picture when they study intellectuals or a society.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we must promote discussion and debate first of all. It is because there is a limit to the ability of every scholar. Scholars of Korean Studies are required to have basic knowledge in philosophy, history, social sciences as well as in literature and fine art. And there are more specific conditions. We need to increase the weighting of provocative agenda setting and active debates in peer reviews. It is desirable that academic conferences should be held on controversial themes. And a journal should be established that specializes in discussions and debates.

